

# ‘검찰 직접수사’ 확 줄어든다... 굵직한 6대 범죄만 가능

### 당정청, ‘검찰 수사 범위 축소’ 개혁안 발표 검·경 협력 의무화... ‘수사협의회’ 운영 재산등록 대상자 및 4급 이상 공직자 한정

당정청이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주요 공직자의 범죄나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의무화되며 협의제도 만들 예정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이날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위법죄 중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

우선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검사과 같은 세무·감사·수사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 등도 포함) ▲4급 이상 주요 공직자 ▲이의 일반 공무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경제범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공개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상 사기·배임·횡령 사건의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직접수사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당선무효와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의 경우에 직접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마약수출입범죄는 경제범죄 중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범죄 영역으로 분류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양측이 중요한 수사절차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는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사이에는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도 만든다.

현재는 심야조사나 장시간조사

를 제한하고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하는 것을 법무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사준칙이 제정될 계획이다.

6대 범죄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검토 대상이었으나 수사 독립성 침해 등을 우려해 제외됐다.

이 밖에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시정조치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향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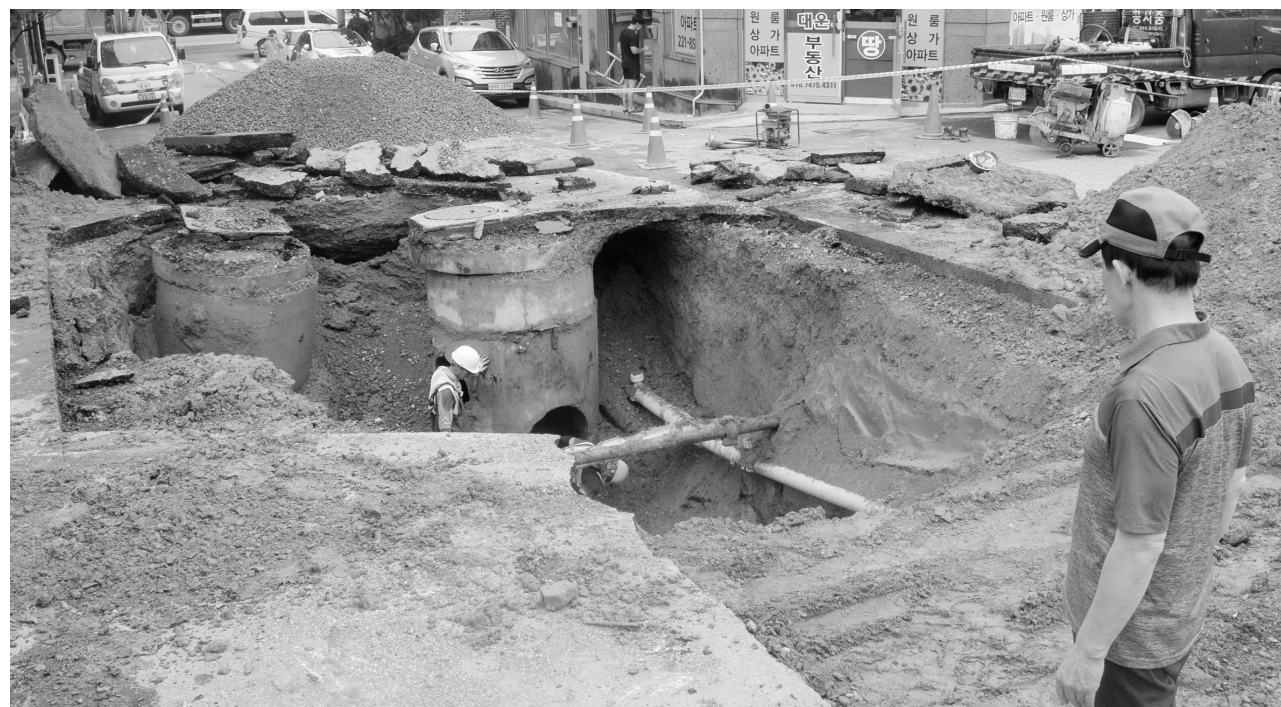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원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안은) 검·경간 기관의 문제라기보다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에 많은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며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

될 때까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면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승호 기자



전주 도심 싱크홀 생성

장마가 이어지며 전북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린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일대에 큰 싱크홀이 생겨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 전남 물류창고 화재안전 긴급 점검

### 불안 해소·안전실태 확인

전남소방본부는 30일 전남도내 물류창고 66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과 이천 물류창고 등에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냉동·냉장창고를 비롯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 65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전남소방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 실태조사에 나선다.

합동조사반은 소방시설 현황과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 물류창고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에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펼쳐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본부

## 코로나19 확산속 장흥 공무원·이장들 대낮 술판 ‘물의’

### 장흥군 징계 착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전남 장흥의 이장들과 공무원 등이 대낮에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전남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장흥 마을 이장단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마친 뒤 관내 식당에서 읍 공무원, 이장 등 56명

이 점심 식사를 하며 술판을 벌였다.

일부 이장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까지도 술판을 이어갔으며 유흥주점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읍 사무소 직원들은 저녁까지 이어진 유흥주점 자리에 잠깐 참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유흥주점 출입 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면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아파트 경비원 신속 대처로 전기화재 막아 ‘소방 표창’

###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받아

광주의 한 아파트 60대 경비원이 가정에서 발생한 전기누전 화재를 빠른 대처로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광주 남부소방서는 30일 아파트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한 A(61) 경비원에 대해 남부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3시께 남부소방서에는 남구 한 지역의 아파트에서 불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서는 민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소방차량

과 구급차, 대원을 출동시켰다. 이어 불이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주변을 살피던 중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가정을 발견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화재는 진화된 상태였다.

입주민이 당황하는 사이 A 경비원이 가정에 비치돼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불이 난 곳에 뿌려 더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A 경비원은 이날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다”는 입주민의 요청을 받고 가정에 들어가 점검을 하던 중 주방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A 경비원은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았다”며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고 출동 소방대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1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이슬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